

다문화 교육의 현실 문제와 개선 방안

차민정* · 강은숙* · 정지윤* · 강경식**

Abstract

한국의 어두운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혼혈아’라 불리던 국제결혼자녀 또는 미군아버지로 부터 버림받은 사생아들은 한국 사회에 포용이 될 수 없었다. 더불어, 그 이후 유입된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의 다문화 가정자녀들도 외국인도 내국인도 아닌, 외계인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말미암아 소외계층으로 밀려나야 했는데, 이는 단일 민족주의를 궁지로, 여기는 한국의 주류층과의 차이가 차별(discrimination)로 변질된 현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는 ‘잠재적 역량’이 될 수 있는 이면적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의 사회, 문화적 신념에 의한 배타적 성향을 지닌 한국 주류층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 이었다. 글로벌 사회의 도래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전체사회의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류외국인 100만 명 돌파의 시대에 돌입 후 정부는 다문화사회 도래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현 상황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의 정부시책에 대한 관심과 자체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며, 이런 노력 하에 전체사회의 변화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의 미래인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적, 제도적, 정책적 인프라구축의 노력에 결실을 가져오리라 본다. 한국사회가 송출국에서 수민국가 대열에 서게 된 이 시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이민과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이주자 대상별로 전반적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현실 및 한국 다문화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 다문화 교육에 대한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적 노력과 사회 전체의 개방적 의식교육을 바탕으로 한 주류계층의 다문화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한 전체사회의 노력 중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본다. 이런 논제에 대한 자체의 네트워킹을 통한 커뮤니티의 협조와 다양한 문화의 활용과 다중언어를 구사의 능력을 소

* 명지대학교 국제교류경영학과

**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유한 이점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자체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그들의 미래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역량강화는 주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전체의 다문화교육과 의식개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물론 다문화 가정의 열악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이를 수용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준비의 부족으로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반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고자한다.

2. 이론적 고찰

세계의 이민역사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인의 이민의 역사적 전례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이민자의 언어소통 문제와 부적응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냉대와, 미비된 제도, 인종적 갈등, 경제적 불화 등 많은 난항을 겪지만, 그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사회의 주류층과 공동구성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예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구성원 개개인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주류층의 차별과 냉대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2.1. 각국의 이민 정책과 다문화 교육 사례

미국은 1620년 영국 종교적 박해를 피해 청교도 이민자들이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시작이 되었으며 초창기에는 인구의 80%가 백인이었고 20%가 흑인이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아시아계 이민이 증가하고 현재는 히스패닉계와 아사아계의 이민 증가세가 지속 되어 왔다. 미국의 이민 주의를 미국적 가치로 통합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다문화 주의를 기반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문화 다원주의로 각 소수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입장의 문화다원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동화주의(assimilation)의 관점의 이민정책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전환을 통해 다민족, 다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보편적인 인권보장을 기반으로 한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과 국가가 제도적 정책을 수립하여 이민정책과 다문화 교육의 질서를 확립하였다. 첫째, 차별 금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외국인과 자국민의 차별을 금지하고 25인 이상 고용인을 둔 기업체에서는 인종, 신념, 피부색깔 국적 등으로의 고용의 차별을 금지 시켰다. 둘째, 주 정부 마다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CA주 의 경우, 2002년도부터 고등학교 3년 과정을 CA주에서 마친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CA등록금(In state tuition)을 적용받아 학비 경감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료보호도 보장을 받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입법화를 통해 다문화 교육정책을 입법화 하여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을 주별 특색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시가 만든 NCLB(No Child Left Behind)과 EVEN START 프로그램은 생활수준이 낮은 소외계층학생, 이

민자 학생을 위한 교육법, 이민자녀 교육 프로그램이다. 넷째,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미국 50개 주에서 다문화 교육대학 프로그램이 있고 다문화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CA 주는 영어학습자 (ESOL/ESL student)를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과 CLAD, BCLAD는 이민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양성과정으로 이중 언어, 각 나라의 문화 등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그리고 NJ 주 또한 ESL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정책으로 형성이 되었고 추후 동유럽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중동지역의 이민이 증가하였다. 캐나다 이민은 모자이크 다문화 주의로 모든 이민자들이 평등을 추구하고 다양성 존중을 토대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며, 2문화 2언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퀘벡의 프랑스인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소외의 불만이 커지자 다양성을 중요하게 인정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성 존중을 위한 사회적 정책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사회 통합을 구현하였다. 첫째, 영어 교육 정책과 이민자 적응을 위한 단체 설립하여 체계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이민자들의 편의와 캐나다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둘째,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급에서 반인종주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식 개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셋째, 다양성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테스트, 각종 대회를 만들어 어렸을 때부터 문화 다양성을 이해 할 수 있게 만들었다.

호주는 1780년대 영국 식민지 이자 죄수의 유형지로 유배되어 생성되었고 1800년대 백인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하여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때 호주는 호주원주민 에보리진 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에게도 매우 배타적 이었다. 1900년대 2차 대전 이후 노동력부족과 인구감소에 따라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쳐 현재는 많은 인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발전되어 왔다. 첫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련 법제를 만들었다. 연방에서 공식적인 영어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이해증진을 위한 다문화 공교육,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2언어 프로그램, 다양성존중 교육, 학교 교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 영어수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아동 이동수입은 다른 현지 아동과의 괴리 유발을 고려하여 모든 다문화 교육 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을 하였다. 둘째, 주 정부는 각 주의 특색에 맞는 다문화 법을 만들고 온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가지 이벤트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시드니에서는 매년 3월 21일 하모니데이를 지정하여 각 국의 이민자와 호주인이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융합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영국은 다문화 교육의 부재와 차별로 인해 잘못된 다문화 교육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영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 이민자들이 급증하였다. 영국 보수 세력은 이민자들의 규모가 상당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동화주의를 주장하였고 이런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2005년 런던테러가 발생하였다. 2005년 런던테러는 영국 이민 2세인 무슬림 청년들에 의한 테러사건으로 성장시기에 심각한 인종 차별과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계층으로 파키스탄 탈레반과 도모하여 반사회적인 테러를 범하였다.

3. 한국사회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의 현실과 정책

현재 한국 결혼이민자는 15만 명에 이르고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 비율과 출산율 감소로 결혼이민자는 앞으로 더욱 많아 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에 잠깐 체류를 하고 본국으로 떠나는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 문제와 문화차이는 결혼생활과 한국에서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다. 대부분의 결혼 이민자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다. 한국에 대한 기초적인 언어교육, 문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직면하게 되어 한국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하고 가부장적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가정폭력, 자녀양육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 여성들은 초, 중 졸업자들로 저학력자로 한국 남성들과 교육적 수준 차이가 크고 연령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교육이 없이는 해결이 되기가 힘든 문제이다. 둘째, 결혼 이민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유치원을 다니거나 사교육을 받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습능력이 일반 한국학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다문화 가정 2세대들 정체성 혼란과 다른 피부색으로 주위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자신감 상실, 자괴감등으로 많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 체류를 하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교육, 보건, 의료 복지 혜택을 일반 다문화 가정과는 동일한 적용을 받기가 힘들다. 이들의 자녀, 중간입국자들의 교육과 한국생활의 부적응에 대한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이들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부모를 따라 이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받아들이고 습득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심각하게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부모가 대부분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할 시간이나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시간이 없어 탈선을 하는 경우 또한 발생한다. 둘째,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 노출로 자녀 취학을 기피하게 된다. 불법체류자 단속 수단이 이들의 자녀를 찾아 역 추적하는 방식이 많아지다 보니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취학할 나이가 되거나 취학을 하다가도 학교를 피해 집에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경우가 있어 자녀의 거주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넷째, 완벽히 한국에 적응한 자녀들은 오히려 한국을 떠나 모국으로 갔을 경우 본국에서 문화적, 언어적 적응에 상당히 어렵고,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에 다닐 수도 없다.

탈북자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동포라는 느낌이 강하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언어는 같아도 반세기 동안 다른 문화로 생활하였으므로 이들 역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첫째, 탈북자 30%는 무직, 10%는 단순노무자, 40%는 정부 생활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적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탈북자 자녀들 또한 한국의 일반 가정 학생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부진하다.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서양문화는 옹호하고 후진국 문화는 배척하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의식을 개혁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급속히 증가하는 다인종, 다문화 인구의 유입으로 인적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NGO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인권보호차원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한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었다. 짧은 수민의 역사로 인해,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은 전반적으로, 양적 횡수의 부족은 물론, 종류별 편중성을 띄며, 동시에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로 인한 콘텐츠의 질적 저조와, 시행기관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나마 다문화 가정 자녀와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민간단체의 보조와 자체적 운영을 통하여 지속성 있게 시행되어 질뿐이다.

4. 다문화 교육의 개선 방안

4.1. 한국형 다문화교육을 실행

다문화 교육이란 개념은 역사적으로 이주 문화로 발전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생성, 발전 되었으며, 현재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진입하는 한국의 경우 그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아보리진이나 인디언과 같은 원주민들의 터에 백인이 주류층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인종의 이주로 나라의 건립과 발전을 시작한 짧은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다. 하지만 영국은 6세기 말부터 앵글로 색슨인 주류층인 백인이 오랫동안 정착해 살아왔고, 그 이후 여러 식민지 인구의 유입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물론 상이한 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위의 신생 세 나라 보다는 영국이 우리나라와 더욱 비슷한 이민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세 주요 국가는 그들의 짧은 역사 속에서 수민정책으로 거대한 영토의 개척을 기반으로 발전을 하였으므로, 인구의 유입은 필수적 요건이었으나, 영토가 작은, 더욱이 단일민족임을 긍지로 여기는 한국과는 내.외적 상황이 확연하게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수민인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선별적 과정 없이 수용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인구에 대한 다양한 사후적 대책을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안정된 다문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4.2. 유치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저 출산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여러 자녀를 원하는 현상은 다문화 유치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7년의 불과 5년 사이 결혼 이민자의 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는 곧 미취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8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인구 통계치를 보면, 실상 취학자녀들 중 초등학생의 분포가 83.4%의 비율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는데, 늘어가는 결혼이민자수와 전체 다문화 가정자녀의 분포도로써 취학 전 아동의 인구가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예상 해 볼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유치교육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초등 4학년이상의 학업이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치와 초등 저학년의 기본적인 한글교육과 학업성취도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육내용의 난위도가 높아져, 성적의 저조현상이 가시화 되는 것이라 추정해 본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이 전체 83.7%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어 실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조적 교육수단이나 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학력에 대한 뒷바침이 약한 다문화가정에서 엄마의 한국어 실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유아기 교육의 실패가 청소년기의 학업실패, 실업률 및 범죄율 증가,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에 있어, 유치교육에 대한 민간단체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4.3. 미래 지향적 다문화교육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입학 한국어 반, 특별학급, 국제 이해 교육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상담교사 지정, 교육과정 개정 시 다문화. 다인종 교육요소 반영 등의 다양한 지원책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을 위해 제시 및 실행이 되고 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규학교들의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한, 다문화 학생 교육에 대한 이해와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상담프로그램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래한국사회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연구방안’에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es)프로젝트에서 ‘핵심역량’의 세 개의 카테고리 즉, 개인의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이질적 그룹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자율적 행동능력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마지막 카테고리인 자율적 행동능력 즉 큰 그림을 그리는 능력, 인생계획과 개인적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권리, 이익, 한계 그리고 욕구를 방어하고 관철시키는 능력이라 정의된 부분의 노력이 진로상담, 전문적 다문화 아동심리상담 프로그램, 학습중단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앞선 두

가지의 카테고리인 개인의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이질적 그룹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리라 본다.

4.4. 직업교육의 강화

조영달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에서 2005년 5월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학교 유입가능 인원 9500명중 1574명만 실제 국내학교에 다니고, 나머지 8000명의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교육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청소년기의 중도입국자녀와 불법체류가정 자녀를 포함한, 정상적 학교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군복무가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채택되어, 장기간의 청년기를 보내는 그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수입이 불안정하고, 고 실업률의 성향을 띤 비전문.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법무부 통계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전체 장기체류 외국인중 93.3%에 해당하는 38만 명 정도가 단순 기능 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새터민 가정 자녀의 경우 취학률이 매우 낮고, 그 중 중등학교 취학률이 현저히 저조하며, 중도탈락률도 매우 높다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북한 이탈 후 제 3국의 체류기간동안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자신의 나이보다 더 저 학년 반에 배속되고 학력의 격차는 물론 심리적,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한다. 서울대 조영달 교수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실태’라는 논문에서 ‘새터민 중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우리나라 전체 중학생의 8~15배이며, 고등학생 중도 탈락률은 8~13배이고, 실업계 고등학생의 3~4배에 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소득적 격차 및 정보의 부족으로 공교육에 의존해야 하며, 고소득 도시 거주 다문화가정 이외에는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계 중.고등학교에서의 중도 이탈율이 실업계 학교의 이탈율의 두 배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직 노동자가 부족한 한국의 노동시장의 실태를 고려하여, 생활과 취업이 직결된 실업계고등학교와 유사한 직업교육이 강화된다면, 취업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4.5. 교사 자질 향상을 통한 다문화 교육 강화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교원연수강좌,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과정 개설, KSL자격증 소지 교사 한국어반 담당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허나 이에 앞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침과 내용을 전문기관의 의뢰를 통해 제작. 실험단계를 거쳐 입증된 내용을 교사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연수 강좌는 단지 이해의 교육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다문화 학습 커리큘럼 지도방안 및, 이중 언어교사의 한국어 지도 양성 방안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교육의 내용이 교육대학 커리큘럼이나 교사 자격시험에 포함

되어, 향후 다문화 사회 예비담당교사의 양성교육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4.6. 교육의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향을 활성화는 교육 전반의 다문화 수용 및 세계 시민 시대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먼저 다문화 가정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멘토링 제도가 일부 대학생이나 퇴직 교원, 군인 등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초,중,고등학생의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하여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접한 추상적 내용을 체험이라는 매개로 교육적 효과를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적 개선 개방만을 위한 법률시정이 아니라 효율성에 중점을 둔 법률 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사랑의 열매 공동 복지 모금회와 같은 다문화관련 민간단체에서 방송업체와 공동으로 지속적 다문화 국민 의식 개혁을 위한 공익방송이나 광고방송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합법적 다문화 이주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이주자에게도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들도 있지만, 제도적인 방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많은 이주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의료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7. 관련 업무 직업의 전문적이고 자격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

인터넷이나 편리한 통신의 개방을 통해, 불법이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부는 법적, 절차적 진행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미 이주해 살고 있는 친지나, 동료의 도움이나 국제결혼 상담소와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합.불법적 경로를 통해 이주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제결혼상담소와 같은 관련기관의 설립에 대한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단속도 어려워 위장결혼이나, 국적취득 후 도주나 이혼의 형태로 불건전한 이민풍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취업이나 다양한 우회적 이민경로도 많아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결혼상담소에 대한 제한과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수민 전문 이민사의 양성과 자격기준을 높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주요 서방 수민국가들의 경제적 경쟁력을 개방성과 혼혈주의의 결과물로 제시하며, 외국의 이민정책을 한국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배제하고, 임시적 방편의 대응책에 불과하며, 국가적 상황의 전문적이고 체계적 분석과 연구가 결여된 일부 편향적 목소리라 하겠다. 글로벌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 저 출산의 문제에 직

면한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외국인 이민 장려책이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 돌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내부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외부에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이내 곧 또 다른 문제점에 봉착하리라 본다. 우선순위를 따져 근본적 해결책을 내부적으로 먼저 찾고, 수용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을 다지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욱 가속화 되는 이.수민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우리시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변별력 없는 수용과 장기적 계획 없는 이.수민 정책은 실업, 한국문화의 균열 및 사회구성원간의 마찰 등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의 결과를 산출할 것이다. 위의 언급한 일곱 가지의 제안이 건전한 다문화 정책을 위한 부분적 제안이라 할지라도, 이미 유입된 다문화인구에 대한 시급한 대책과 주요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민 제도의 정비와 정책의 수립과 같은 전반적인 인프라의 구축 및 효율적 실행의 선행을 거시적 안목의 구조를 근간으로 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전제로 제안된 내용이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자체적 노력을 위의 제안된 내용을 병행하여,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실은 확대되어 지리라 믿는다. 세계이민시대를 한국은 사후적이 아닌 미래지향적 계획아래, 예방적, 정책적 노력들은 선도적으로 열어가야 할 것이다.

6. 참고 문헌

- [1] 박성혁, 성상환, 곽한영, 서유란, 이수이, 김명정, 송성민, 우희숙(2008),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2]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실태』, 교육 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 [3] 양계민, 조혜영, 이수정(2009), 『미래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4] 권재일, 서덕희, 서현정, 이태주, 조용환, 한건수, 한경구, 한준상, 황병하(2008),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동녘출판사.
- [5] 정지윤(2011),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실태와 요구 분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구정희(2010), 『More Together More Happy』, 경기도 지원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 자료집.
- [7] 교육 과학 기술부 http://www.mest.go.kr/me_kor/index.jsp
- [8] 법무부 <http://www.moj.go.kr> (체류외국인 100만 명 돌파)